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적발... 2년간 6.8조 이자수익

LTV 정보교환하며 경쟁 회피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시정명령·과징금 2720억 부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사의 LTV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다만 제재 대상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로 한정했다.

LTV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대출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는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내몰릴 가능성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 커진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지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

겨 적고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식이 전·후임자 간에 인수인계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이 이어졌다.

4개 은행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내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상가·공장 등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해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이유로 낮추고, 경쟁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4대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 등)보다 7.5% 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 제고나 신용리스크 감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 약 6조 8000억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 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이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LTV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LTV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24년 11월 전원회의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심사가 진행됐고, LTV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윤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은,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AI ‘BOKI’ 도입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기반 구축
조사연구 지원 등 5가지 서비스 제공

한국은행이 네이버와 손잡고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AI ‘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를 자체 구축했다. 한은 내부망(on-premise)에 올린 형태로 글로벌 중앙은행 최초 사례다.

한국은행은 21일 네이버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LLM 모델 제공을 바탕으로 금융·경제 특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BOKI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해 자체 AI를 구축해 왔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BOKI가 데이터 보안이 확보된 한은 내부망(on-premise)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모형(하이퍼클로바X)을 기반으로 구축됐고 실제 업무에 활용

될 AI 서비스는 한국은행 직원이 자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버전은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연구 지원 ▲법규·규정 확인 ▲개인문서 활용을 돕는 업무용 챗봇 ▲금융·경제 특화 번역 ▲한국은행 데이터와 AI를 연계한 금융·경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이다.

이창용 총재는 한은의 AI 도입이 다른 중앙은행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소버린 AI’와 ‘망분리’를 제시했다. 다수 국가가는 글로벌 빅테크 AI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데이터 보안만 자체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한국은 자체 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산업 생태계 육성과 금융·경제 특수성 이해를 위해 소버린 AI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망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AI 활용과 기존 망분리 정책이 양립하기 어려운 단계다”라며 정부 정책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국가정보원 협력 하에 망개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소버린 AI 구축과 망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첫 기관이 됐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달 공개되는 버전은 망분리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인터넷 정보활용에 제약이 있고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며 “오는 3월 망분리 개선이 완료되면 한은 AI의 활용 범위와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AI 도입이 업무 효율뿐 아니라 조직 문화도 바꿀 것으로 내다봤다.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약 140만 건 내부 문서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했고, 지식자산을 통합 관리·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희 기자 gh471@

정기선 회장, 4년 연속 ‘다보스포럼’ 참석 (HD현대) AI·에너지 등 첨단산업 미래 방향성 논의

팔란티어 등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와 학계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올해는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19~23일 열리며, 정 회장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참석해 올해로 네 번째다.

정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주요 공식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리더들과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접근성·회복탄력성·AI의 역할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글로벌 성장 동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 산업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럼 둘째 날인 20일(현지시간) 세계적 엔터프라이즈 AI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겸 CEO 알렉스 카프와 만나 양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HD현대에는 기존 협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로보틱스, HD현대마린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지난 2021년 HD현대오일뱅크를 시작으로 ▲조선·해양 ▲에너지 ▲건설기계 등 핵심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사무실에서 정기선 HD현대 회장(오른쪽)과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겸 CEO(왼쪽)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HD현대

사업에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솔루션과 인공지능 플랫폼(AIP)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왔다.

정기선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 확대는 그룹 전반의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더 빠르고 정교한 의사결정으로 이어가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팔란티어는 세계적 AI 기반 분석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HD현대의 디지털 전환에 실행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HD현대는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양사의 파트너십 확대는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HD현대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함께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D현대는 향후 팔란티어와 공동으로 ‘센터 오브 엑셀런스(CoE)’를 구축해 임직원의 고급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 역량을 체계화하고 AI 기반 혁신을 이끄는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유죄... 징역 23년 선고

12·3 비상계엄 재판

한 전 총리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하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하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

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하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뉴시스